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17 / May 2018

05

재정 인사이트

기획 특집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

재정칼럼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시사점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바라본 국가채무관리 방향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성과분석 강화 방안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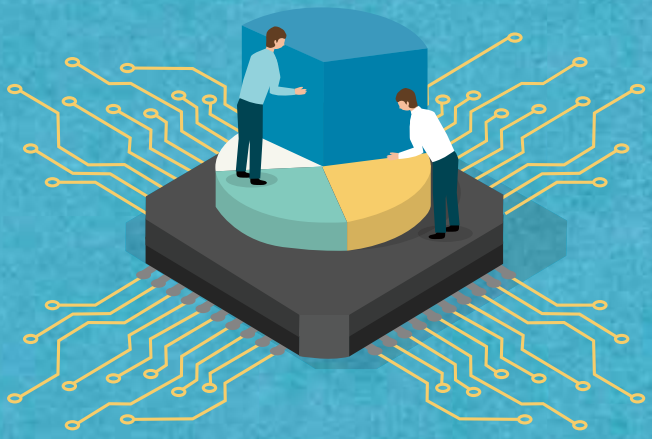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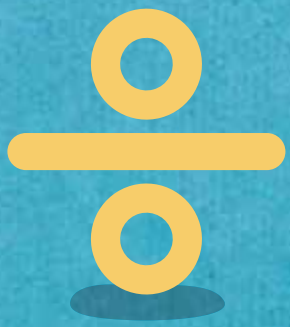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소통 성장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힘

나무가 성장하려면 햇볕이 필요하듯이
조직과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상대의 생각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만드는
햇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린 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Y
2018 Vol. 17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
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적정성평가팀장

12 **재정칼럼**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시사점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바라본 국가채무관리 방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성과분석 강화 방안
배득종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재정과 정보

24 **이슈포커스**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방향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37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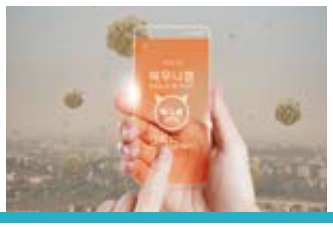
48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미세먼지

52 **해외재정동향**
영국의 경제·재정 전망과 재정 중점 분야:
2018-2019 예산안

60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64 **도서 소개**
한국재정정보원,
「사례로 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용」 출간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

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적정성평가팀장

재정칼럼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시사점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바라본 국가채무관리 방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성과분석 강화 방안

배득종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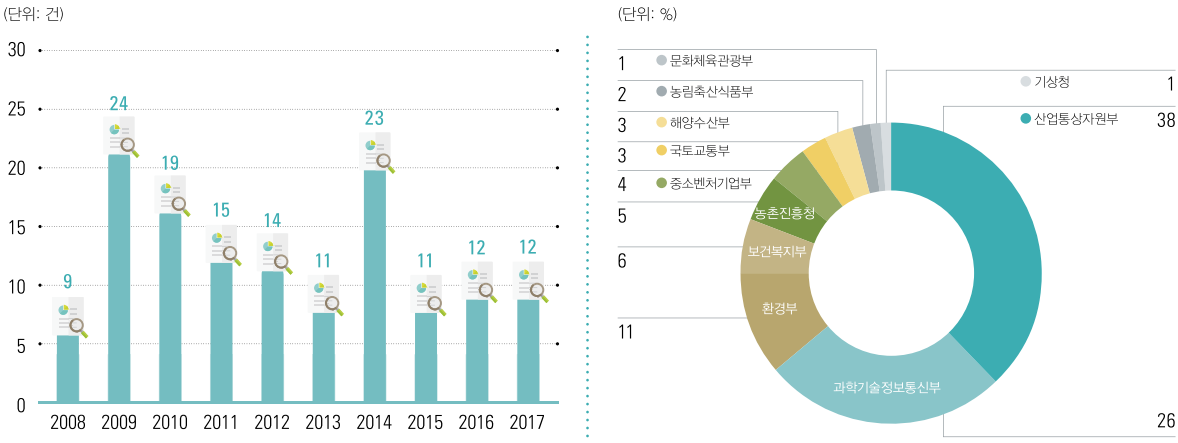
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적정성평가팀장
kitekim78@korea.kr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국가사업은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제도시행 초기인 1999년에는 공공건설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정보화 부문, 연구개발 부문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 부문은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응용으로 표현되는 비정형적 활동이라는 특성상, 타 부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삼는 것과 달리 '기술적 타당성'을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추가하고 있다. 조사 수행기관 측면에서도 타 부문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하는 반면 연구개발 부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맡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6일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의 3은 기획재정부가 연구개발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조사 운용지침」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8년 4월 17일부터 새로 연구개발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배경과 기본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연간 조사사업 수와 신청 부처 현황



개편 배경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매년 신규 신청되는 조사대상 사업 수는 부침이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된다. 2017년까지 접수된 150개[1]의 대상사업을 신청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순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다른 투자사업과 차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다수를 차지하는 SOC 건설은 가시적인 결과물이 존재하고 이용자가 얻는 편익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지식이라는 결과물이 추상적이고, 기술개발 성공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는 모호함이 있어 타당성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개발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전성과 창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어려움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우선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사항목도 세분화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사 수가 누적되면서 제도상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비교적 유연한 조사항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의 근본원리를 탐구하는 기초연구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응용연구는 지향점이 서로 다른데도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초연구는 단기간에 상품화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 평가를 적용하기 곤란하였다.

1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였거나 철회된 사업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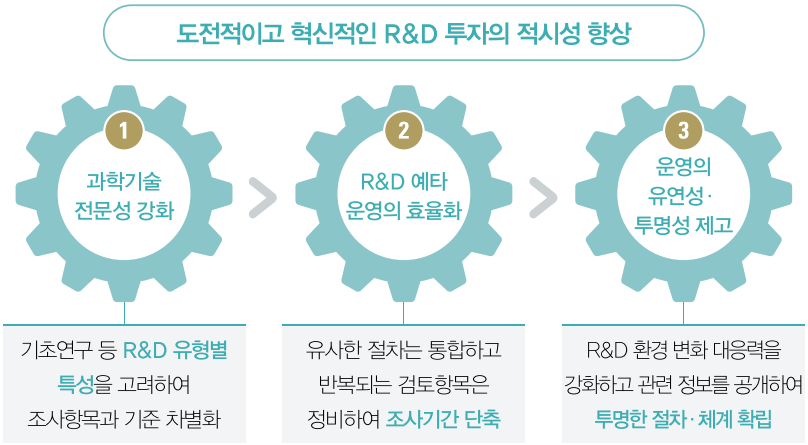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총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내용과 조사항목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기획과정에서 설정했던 기술적 목표들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불필요하게 되어 버린다는 일선 연구자들의 호소도 종종 접수되었다.

한편 조사 담당부처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사업기획과 느슨한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도 외면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시행으로 결론 내린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불허하다 보니, 사업을 기획한 소관부처로서는 퇴로가 막힌 셈이 된다. 결국 사업내용에 다소 미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론 이후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평가를 하게 되므로, 사전평가와 사후관리 사이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상존하였다.

제도 혁신 방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상기 논의를 토대로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 혁신의 주요 방향은 ①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② 예비타당성조사 운영과정을 효율화하며, ③ 운영의 유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의 주요 방향



01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기존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한 AHP[2] 의사결정 시 주요 평가항목별로 가중치 부여의 범위가 동일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특성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중치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즉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를 최대 60%로 상향하고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적 측면의 기획과정, 사업목표, 구성·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개발 유형별 AHP 가중치 차별화

현행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40~50%	20~30%	30~40%

개선

유형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기초연구	50~60%	30~40%	5~10%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 등	40~60%	20~40%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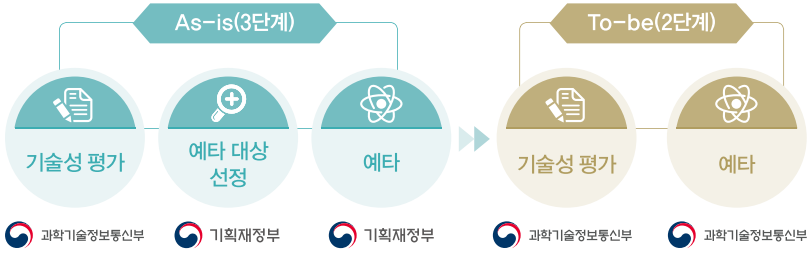
또한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 중에서도 대규모 장기사업[3]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전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획부처에서 희망할 경우 사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기획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2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의미한다.
3 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이다.

02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효율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도 신속해진다. 기존에는 신청 과정에서 사전 검토 단계인 기술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통과 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기획재정부 소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없이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 평가의 항목을 간소화[4]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효율화



4 소분류 기준 평가항목 30개 → 10개로 간소화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불허한다. 조사과정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최초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낭비요소를 방지하면 과거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던 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3 운영의 유연성·투명성 제고

사업계획 변경을 불허한 대신, 미시행으로 결론 난 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을 해소·보완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평가[5]를 통해 지속추진·사업변경·중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기획과 수행단계에서 기술개발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비롯하여 관련 자료 등을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맺음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나 시장실패가 나타나기 쉬운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학기술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타당성을 조사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시된 혁신안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문의 예비타당성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의 정책-기획(예비타당성조사)-예산-평가의 종합 연계와 환류 체계가 구축되었다.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잘 정착되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더 신속하게 수행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이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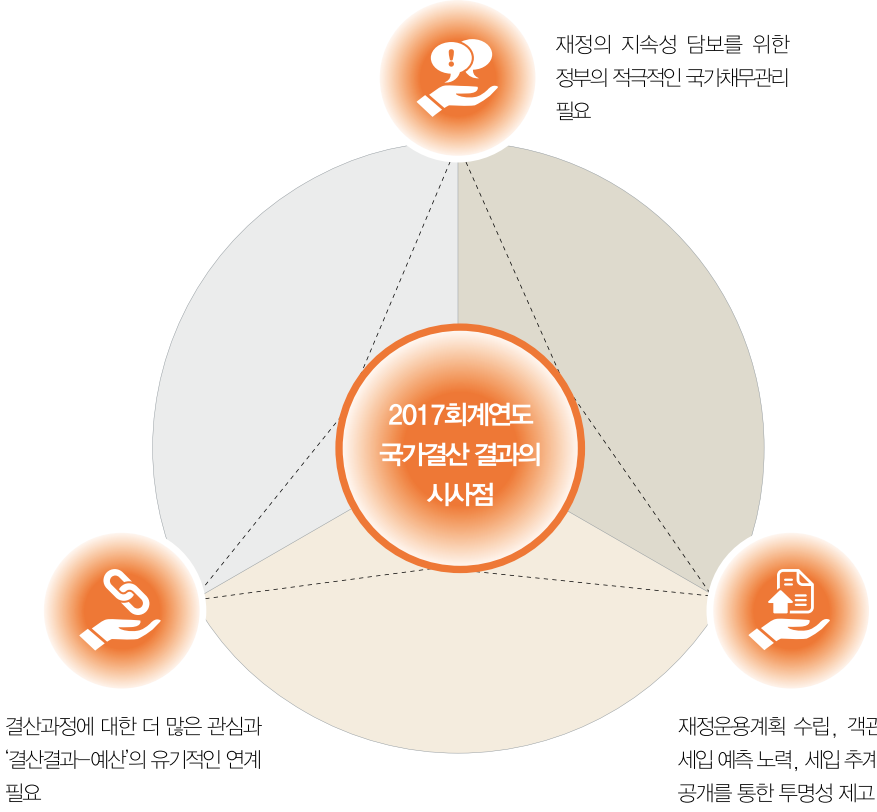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kimbong@sun.ac.kr

PUBLIC FINANCE COLUMN

지난 3월 26일,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결산 결과 2017년도 총지출은 406.6조 원으로 2016년에 비해 5.6%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430.6조 원으로 7.2%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7.1조 원 개선된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8.5조 원 적자를 보였으나 이 또한 2015년의 38조 원 적자, 2016년의 22.7조 원 적자와 비교할 때 계속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또한 지난해 12.8조 원에 비해 3.4조 원 증가한 16.2조 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도 11.3조 원에 달해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안정성의 중요한 지표인 국가채무는 660.7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8조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이다. 발생주의로 계산한 국가부

채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2.7조 원이 증가한 1,555.8조 원으로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잠재적 부채인 충당부채로 지난해에 비해 93.2조 원이 증가한 845.8조 원이다. 공무원의 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2.5%에서 54.3%로 증가하였다. 이번 결산결과는 아래 세 가지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채무 혹은 부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38%로 115%인 미국, 233%인 일본 혹은 116%인 OECD 평균 보다는 낮아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보장적 지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국가들과 향후 사회보장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



분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따른 할인율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2016년 92조 원에 이어 2017년도에 93조 원의 충당부채 증가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기대여명의 증가, 정부 정책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는 향후 충당부채에 더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둘째, 잉여금의 감소와 세입·세출의 예측력 향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2017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 원으로 2016년도의 12.8조 원, 2015년도의 8.7조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굳이 구축 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간 부분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산상 잉여금의 발생 원인도 2015년, 2016년에는 총지출이 예산 대비 각각 12.7조 원, 13.6조 원 줄어든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총수입이 예산 대비 7.5조 원 증가, 총지출은 3.5조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

Predictability & Sustainability

다. 예산 대비 지출액의 미달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 부진과 미집행 해소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입 오차 문제는 더 우려스러운데 국세수입의 경우 2016년도에는 222.9조 원을 예상했으나 242.6조 원을 걷어 오차율이 8.1%였고, 2017년도에는 241.8조 원을 예상했으나 265.4조 원이 들어와 오차율이 9.7%이다. 장기 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수입계획과 실제 수입액간의 괴리도 심각한데, 2015-2017회계연도 결산을 과거 총수입 계획과 비교하면 연간 오차액의 평균이 17.8조 원으로 총수입 대비 5.9%의 오차 수준이다.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최초 수입 예측금액과 결산금액의 차이는 43.5조 원에 달한다.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정부의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 세입보다는 경제 상황을 감안한 객관적인 세입 예측 노력과 동시에 세입 추계 방법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오류를 줄여 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산과정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결산결과와 예산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편성 시와 제출 시에는 다양한 분석 자료와 홍보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정치권 또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예산 결정 과정에 관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예산이 실제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논의 과정인 결산에는 정부의 홍보나 분석이 부족하고, 정치권 또한 다른 정치적 의제들에 밀려 형식적인 과정으로 결산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채무나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여 국민에게 증가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공유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정부결산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결산심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국회도 효과적인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차년도 예산삭감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바라본 국가채무관리 방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parkj@ehwa.ac.kr

PUBLIC FINANCE COLUMN

2017년 나라살림이 국가결산으로 마감되었고 각 주무부처에서는 2019년 예산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대외 경제여건이 양호해 수출실적이 좋았고 반도체 특수 등 기업운영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모든 재정지표들이 예산 수립 때보다 나아진 상태로 마감되었다. 특히 세금이 잘 걷혀서 11조 원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이 11.3조 원이나 돼서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학생 1악기 지원사업과 ICT인프라 개선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주머니(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로 인한 효율적인 살림 운영의 어려움과 18.5조 원에 달하는 적자 추이는 나아질 줄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1,555.8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규모보다도 증가속도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국가부채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GDP 대비 90%에 육박하고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는 세대 간의 심각한 불공평을 야기한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현 세

대가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 있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의 급변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고에서는 국가결산 특히 국가채무관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투명한 재정정보와 재정민주주의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결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 예산이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결산은 실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 정부가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명서가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예산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의 병행, dBrain시스템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결산의 정부 해명책임(account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다. 현재, 금액 규모만으로 총세입, 총세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결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최소한 2017년 예산편성 시 공약했던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에 대한 성과보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2019년 예산편성에 어느 부분을 고치고 바꿔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단년도 중심의 결산관행을 바꿔야 한다. 전년 대비 세계잉여금의 규모와 국가채무 증가 수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정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 하겠다. 예산도 단년도 중심의 편성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중기재정계획으로 확대하고 있고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계하고 있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해 결산에서도 중장기적인 시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감사원 역할을 하는 국회의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재무부, 백악관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함께 생산하는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우리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와 함께 사회보험, 연금을 포함한 향후 75년간의 장기재정추계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무회계를 2009년부터 도입해 2011년도부터 정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결산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국가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규모 변동만을 보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400조 원이 넘는 재원 사용에 대한 해명책임과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국가채무 규모 660.7조 원 수준은 GDP 대비 38.6%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한 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22.7조 원이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최근 낮은 이자율 추이에 따른 할인율 하락에 기인한다는 정부

의 설명에도 충분히 경고등을 켤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군인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정범위에는 57.3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과 5.4조 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작은 정부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보건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복지사회의 성숙으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질병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므로 투명성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차원에서 이들 항목을 기금화해 재정 내로 편입하는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월급명세서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채 만져 보지도 못하고 부담하는 세금,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는 모두 재정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라는 애매한 주머니로 지금과 같이 계속 운영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무지출(entitlement) 항목이기 때문이다.

국가결산은 나라살림에 대한 국가의 해명책임보고여야 하고 이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보고여야 한다. 결산정보의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dbae@yonse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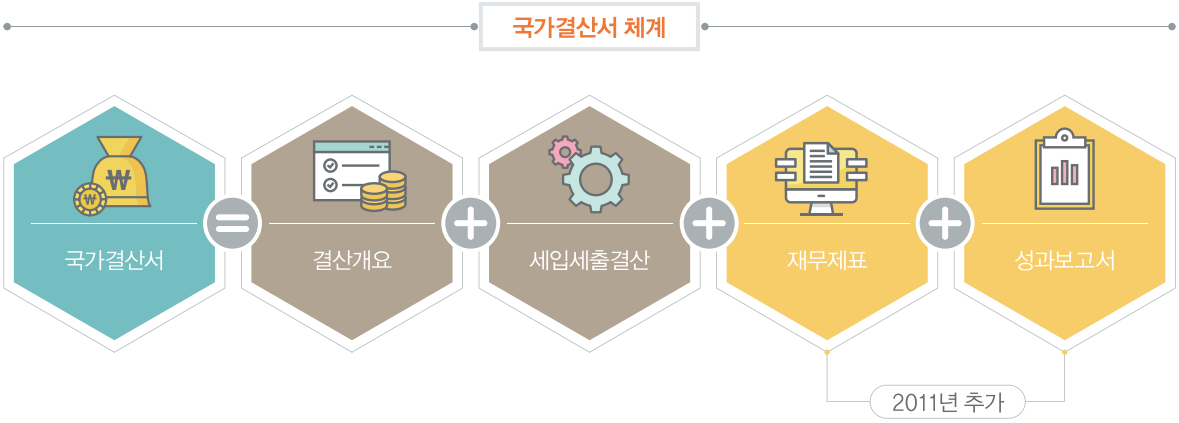
PUBLIC FINANCE COLUMN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성과분석 강화 방안

요즘 미투다, 갑질이다 하여 사회가 소란스럽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별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은 우리들의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오랫동안 근대화였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선진사회화로 바뀌고 있다. 선진화란 관점에서 보면, 미투도 갑질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결산서를 선진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현재 국가결산서 체계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은 종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는 2011년부터 추가되었다. 이처럼 국가결산서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선진화에 매우 잘 부합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결산서를 읽어 보면, 이것이 영혼이 없는 문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숫자만 잔뜩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수치들이 지향하는 바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결산서 속에는 분명 국정 운영을 위한 귀중한 정보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선진화 요구에 부응할 정보로 가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예산서와 결산서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예산서를 국가의 운명서(運命書)라고 부를 만큼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 재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여, 저러저러한 성과를 올리겠으니, 국민에게 세입세출을 승인해 달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산서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한 결과 저러저러한 성과가 달성되었다든지, 여타의 이유로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언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예산과 결산은 수미쌍관(首尾雙關)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가결산서에는 1) '결산개요'에서 예산편성의 취지를 조금 설명하고, 2) 이것과 전혀 연관성 없이 '세입·세출결산'을 한다. 3) 그런 다음 세입·세출결산과는 다소 동떨어지게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4) 2016년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347면에 달하는데, 그중 '성과보고서'는 오직 14면(결산서 전체 분량의 1%)에 불과하다. 성과보고서의 분량이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온다. 우리나라 정부의 성과지표가 5,220개가 있단다. 그렇게 많아서, 뭐 했는데? 이들 중 76.1%가 목표를 달성했단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이런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예산을 받아 가면서, 약속했던 목표들은 두꺼운 결산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17년 국가결산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2018년, 2019년 등 이후에 작성될 국가결산보고서들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비슷한 문서가 비슷한 포맷으로 계속 생산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결산서가 영혼을 되찾으려면, 근본적인 규범에서부터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정규범은 ① 총량 재정규

율, ② 효율적 재원 배분, ③ 운용 효율성이다.

이 중 총량 재정규율은 현행의 국가결산서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 재원 배분에 대한 국민의 알 요구는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잘 부응되지 못하던 가운데, 간신히 제도화의 돌파구를 이룬 것이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이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나, 지금도 국회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로 저출산·고령화 결산을 하자, 청년취업 결산을 하자, 기후변화 결산을 하자, 소득재분배 결산을 하자 하는 등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예·결산에서 효율적 재원 배분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요구들이다. 정부가 자원을(최소한 예전보다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산 포맷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매년 3월경, 정부는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이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특이사항'으로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 대신, 국유건물의 총가치는 얼마였는데, 감가상각이 얼마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유지보수비를 지출하여 감가상각을 대체한 결과, 현재 국유건물의 총 가치는 얼마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이 선진사회화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 내친 김에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연결하기 위한 '재정운용결과조정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용효율성과 관련하여, 성과보고서 자체의 문제보다는, 성과관리를 하는 관련 제도의 미비가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정부사업의 성과가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라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성과, 집행 단계에서 수정된 성과, 그리고 결산 단계에서 밝혀진 성과들을 서로 비교평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드포워드(feed forward)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성과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outcome-output〉 구도에서 탈피하여, 〈계량적 성과-정성적 성과〉 구도로 바꾸어서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각 부처청별 홈페이지에 예산과 결산 현황, 그리고 성과보고를 찾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공시도 다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이 뒤처진 것이 확실하다.

최근 모든 정부사업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80여 개의 핵심정책을 중점적으로 성과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개선사항을 결산서에 담을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핵심정책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산과 결산이 수미쌍관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결산의 선진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결산서가 될 것이다.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방향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미세먼지

해외재정동향

영국의 경제 · 재정 전망과 재정 중점 분야: 2018-2019 예산안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도서 소개

한국재정정보원, 「사례로 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용」 출간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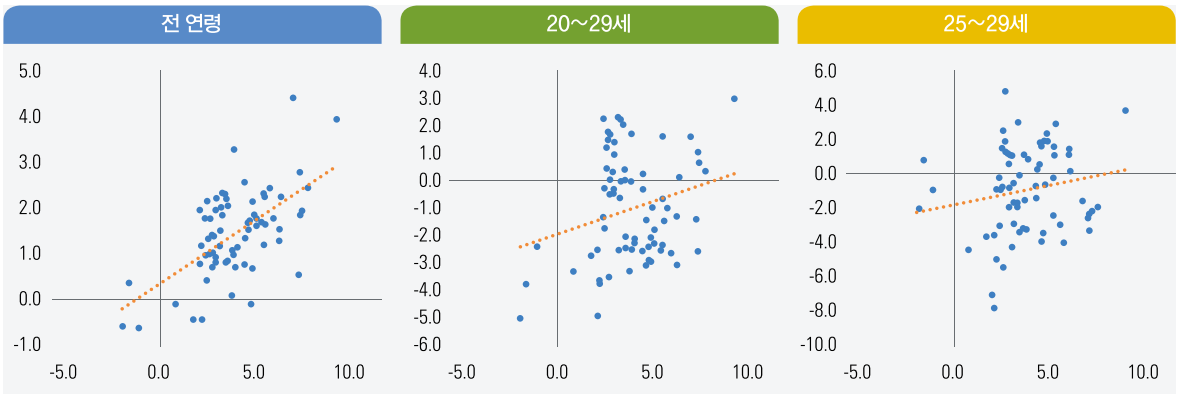
김명규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mkim@kpfis.kr

정부 고용정책 필요성

고용 상황의 변화와 경제 여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호보완 관계가 있다. 이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생산 확대를 위해 고용 수준과 임금을 확대한다. 한편으로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국민소득이 개선되면 소비여력이 확대되어 경제가 개선되는 선순환 관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 비교(2000년 3/4분기~2018년 1/4분기)

(단위: %)



주: x축은 경제성장률, y축은 취업자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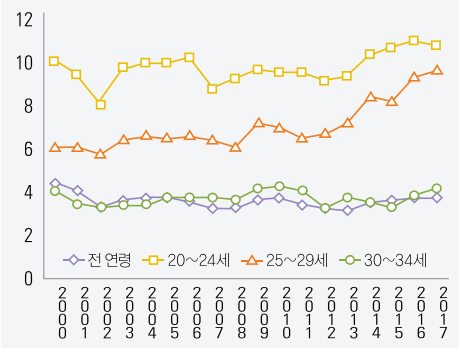
계도 있다. 2000년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증감률은 양의 관계가 뚜렷하여 상호보완 관계를 잘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은 전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1]. 이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다른 연령층보다 경제 상황 이외에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초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민간 부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부문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년 노동시장 현황

청년 노동시장은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른바 에코 세대[2]라고 하는 20대 후반(25~29세)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이 격화되어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률(15~29세)이 2017년 9.8%에서 향후 3~4년간 1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높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구분해 보면,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인 20대 후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초반은 아직 경제활동참가율(2017년 50.6%)이 낮아 적극적 구직자가 아니고, 30대가 되면 취업 경험(또는 구직 경험)이 많은 연령대임을 볼 때, 20대 후반 청년 노동시장 여건이 가장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 대책에 있어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청년층에 특화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연령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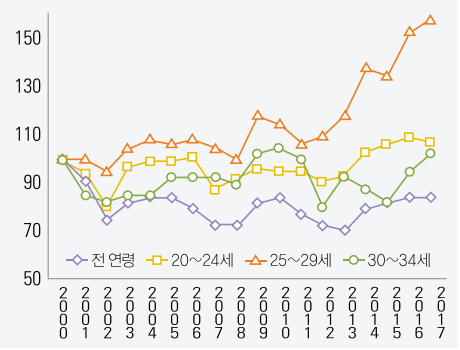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 연령별 실업률 상대 변화

(단위: 2000=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상황은 공식 실업률보다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식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과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을 보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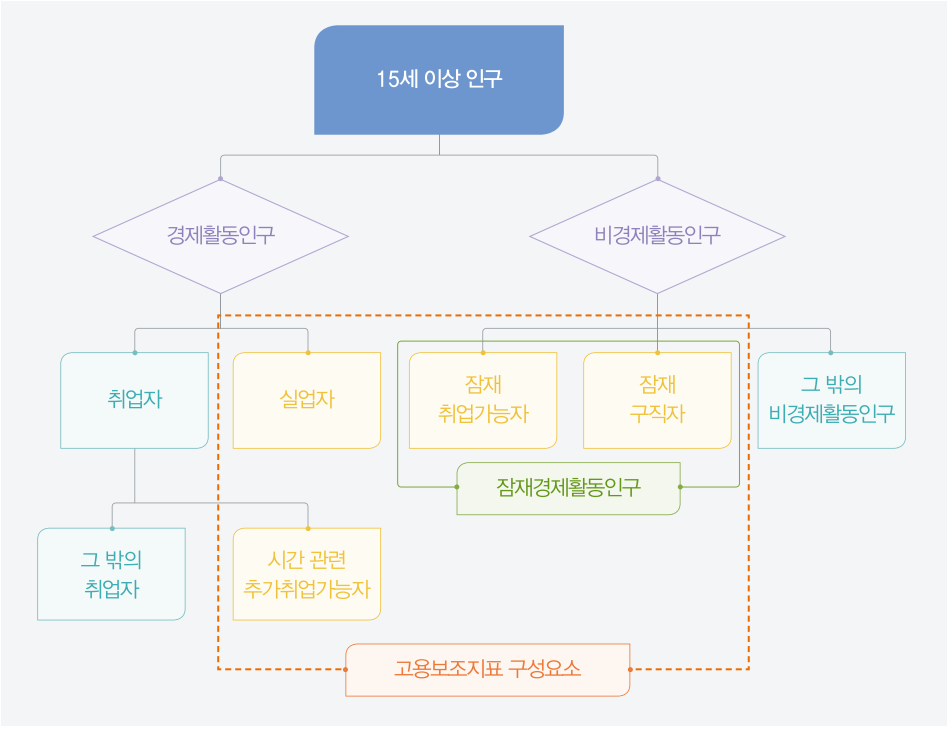
1 2000년 3/4분기부터 2018년 1/4분기까지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전 연령층이 0.6041인 반면, 20~29세는 0.2505, 25~29세는 0.1751로 나타났다.

2 에코 세대(echo-boom generation)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포괄적으로 말한다.

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를 2015년부터 조사·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편의점,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실질적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3]'로 분류하고 이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1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잠재취업가능자[4]와 잠재구직자[5]를 합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여 반영한 고용보조지표2와 고용보조지표3을 발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청년 실업률이 9.0%에서 9.9%로 증가하는 동안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고려한 고용보조지표1은 10.7%에서 11.7%로 증가하였고,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한 고용보조지표3은 21.9%에서 22.1%로 확대되었다. 넓게 보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실업상태라는 의미이다. 전 연령층 고용보조지표3이 11.0%인 것에 비교하면 청년층은 두 배 이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전체 실업자의 청년층 비중도 2015년 39.8%에서 2017년 41.6%로 증가하였다.

고용보조지표 구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4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이다.
5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비교

(단위: %, %p)

고용보조지표별	전 연령(A)			청년층(B)			B－A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실업률	3.6	3.7	3.7	9.0	9.8	9.9	5.4	6.1	6.2
고용보조지표1	5.5	5.5	5.7	10.7	11.6	11.7	5.2	6.1	6.0
고용보조지표2	9.4	8.9	9.1	20.6	20.5	21.1	11.2	11.6	12.0
고용보조지표3	11.2	10.7	11.0	21.9	22.1	22.7	10.7	11.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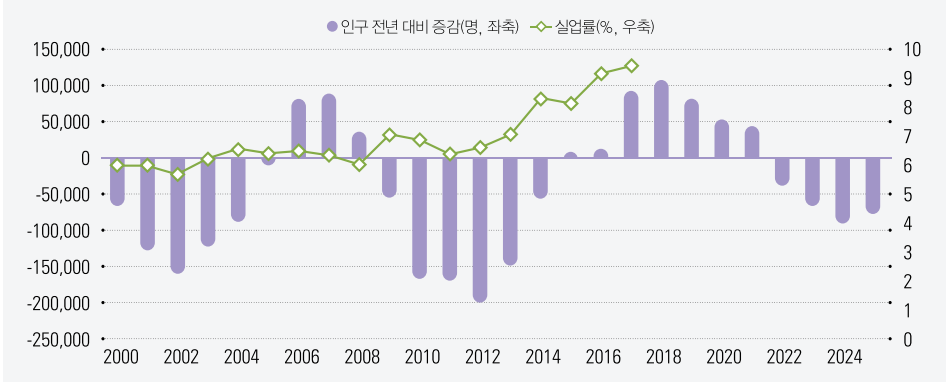
주 1) 고용보조지표1(%)=(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보조지표3(%)=(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최근 청년 노동 시장의 문제점

청년 노동시장 구직난은 인구 구조적 문제와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복합적 현상이다. 인구 구조적 문제는 20대 후반 에코 세대가 본격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구직경쟁이 심화[6]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대 후반 청년층의 전년대비 인구는 2006년~2008년과 2015년~2021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2013년부터 전년대비 청년 인구 감소폭이 줄어들고 2015년 증가로 전환한 시기에 청년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청년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노동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2018년(11.0만 명 증가)과 2019년(8.3만 명 증가)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면 현재 시점의 20대 후반 연령층 구직난이 30대 초반까지 지속되고 30대 초반 구직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25~29세) 인구 변화와 실업률 비교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6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20~24세)이 50.6%, 20대 후반(25~29세)이 75.9%이다.

또 다른 청년 고용부진 심화의 원인은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요부진이 지속된 것에서 기인한다. 기술혁신과 생산 자동화 등으로 산업 고도화에 따른 취업구조가 변하였다. 2006년 대비 2017년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 수는 사무직이 26만 명 감소하였고, 생산직 20만 명 감소, 전문직 8만 명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13만 명 증가하였다. 산업 측면에서도 기존 주력산업으로 고용창출이 많았던 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의 노동수요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조선·자동차 고용도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2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7].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2017년 기준 20.1만 명(통계청)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청년 노동수요 부진은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고,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은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만 명 채용 규모를 늘렸으나, 2011년~20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8만 명 채용인원 증가에 그치는 등 신규채용 증가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경력이 적은 청년층 대상 노동 수요가 위축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경력직 채용 선호 비율이 30.9%로 2009년 17.3%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교육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채용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근무 경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채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청년 고용정책 방향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는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최근 청년 노동시장에 에코 세대 유입에 따른 문제와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다. 첫째, 취업 청년에게 소득·주거·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연봉의 1/3 수준(9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대출하거나 일부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 교통비 등 주거 교통비 경감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장기근속 시 목돈 마련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 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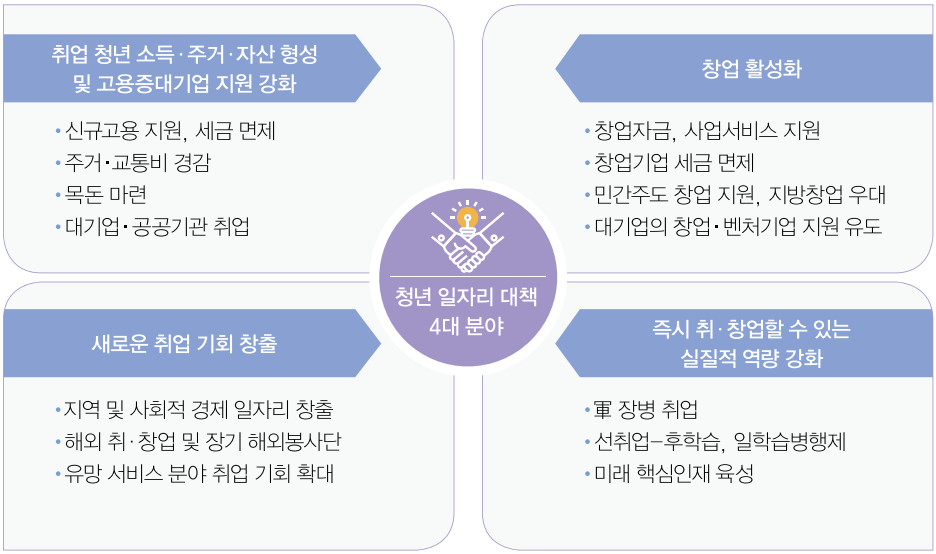
7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

둘째, 청년 창업을 위한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금을 참신한 혁신 창업아이디어(생활혁신형 창업)에 1천만 원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 창업을 위해 최대 1억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R&D·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지역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해외 취업기회를 창출한다. 지역 민간기업과 산단 활성화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기업·한인기업·국제기구 채널을 활용하여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해외 청년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취업 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일학습병행제[8]를 확대한다. 군 장병이 중소기업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과 교육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 해당 지역 취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4대 분야 중점 추진 방향



8 일학습병행제는 직업교육에서 일과 교육훈련이 더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독일과 스위스 직업훈련체제(Dual Training System)를 참조해 2014년 시작한 정책이다.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추경예산안으로 3.9조 원[9]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2.9조 원(일반회계 1.9조 원, 기금 1.0조 원)을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다[10]. 세부 내용으로는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에 1.7조 원, 창업 활성화에 0.8조 원, 창업 기회 창출에 0.2조 원, 선취업·후진학 지원에 0.1조 원, 실질역량 강화에 0.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정부는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은 183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19.2조 원을 투입한다. 50개 직접일자리사업에 3.2조 원, 직업훈련 50개 사업에 2.1조 원을 투입하고, 19개 고용장려금사업으로 3.7조 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을 위해 6.9조 원을 투입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개 사업에 2.5조 원을 지원한다.

2018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조 원, 건)

구분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창업지원	합계
예산액	3.2	2.1	1.0	3.7	6.9	2.5	19.2
사업 수	50	50	35	19	10	19	183

주: 예산안 기준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월간「나라재정」2018년 2월호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청년층의 소득보조,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해 청년을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20~100%)만큼 선발하도록 우선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정 사업의 취업취약계층을 전체 채용 인원의 30%로 채용한다고 할 때, 청년층 참여목표 비율이 100%이면 취업취약계층을 모두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청년층 우선선발 대상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1.2조 원(세부사업 기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50개 중 절반이 청년층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고용하고 있다.

9 추경 재원은 20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하여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추진한다.

10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을 위해 1.0조원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8년 청년층 우선선발 직접일자리사업

(단위: %, 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참여 목표 비율		본예산
		취약계층	청년층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50	100	123
국토교통부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	30	70	283
국토교통부	항공 전문인력 양성	35	100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30	100	382
농업진흥청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지원(ODA)	25	100	210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진흥 지원	30	70	7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 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35	100	1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0	70	1,24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30	70	315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30	70	506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35	70	118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40	20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 지원	10	70	1,351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	30	20	867
산림청	국제산림 협력	55	100	60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35	20	262
산림청	숲 가꾸기	45	20	2,090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40	20	670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	45	20	1,084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30	20	197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5	20	517
외교부	해외 봉사단 및 국제개발 협력 인재양성(ODA)	45	70	1,29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물 정리	40	20	8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동화 지원	35	70	96
환경부	환경 지킴이(자연환경 해설사만)	40	20	345
합계				12,467

주: 예산은 세부 사업 본예산 기준으로, 내역 사업 예산을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산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7.12.)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7.12.)
-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
- 기획재정부. 2018년 추경예산안. (2018.4.)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 (2009.4.)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 (2017.4.)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월간 「나라재정」 2018년 2월호. (2018.2.)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논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장
jihoonpa@korea.kr

올해부터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1,206건의 국민참여예산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도 도입 경과: 2017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18년 본격 시행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에 시범 도입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교통 편리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356억 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본격 시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민간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시행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가재정법」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하여 동법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도 주요 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안에서 운영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01 국민의 사업 제안: 전국에 효과를 미치는 50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을 제안

첫째,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나라살림이 편성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3월 중순 오픈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을 제안대상으로 한 이유는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전국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물론이고, 사업 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2차년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한 사업도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신규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계속사업)은 국민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계속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은 가능하다. A사업의 운영방식을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를 정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이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여 바우처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한 예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재정지출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야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빠른 시일 안에 제안국민에게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제도 정착 이후에 대상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02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적격성 점검 및 사업 숙성

둘째,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

하여 해당 부처로 송부하면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되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한다. 동 협의회는 민간전문가, 기재부, 각 부처로 구성되는데 부처가 적격성 점검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전문가와 기재부는 필요할 경우 부처와 협의하여 적격성 점검 내용을 수정한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한다. 국민의 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킨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5월 말 숙성 과정을 거친 국민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한다.

03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셋째, 6월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국민들이 제안하고 각 부처가 숙성하여 기재부에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하는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04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넷째,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흐름(안)

〈1~3월〉
운영준비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마련 및 각 부처 통보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3~5월〉
사업제안
- 국민 사업제안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숙성

〈5월〉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 각 부처는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 파악을 위해 성(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사한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참여예산사업도 예산안의 일부이므로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홈페이지 구축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네티즌 의견 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6~7월〉
사업논의
-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 참여단, 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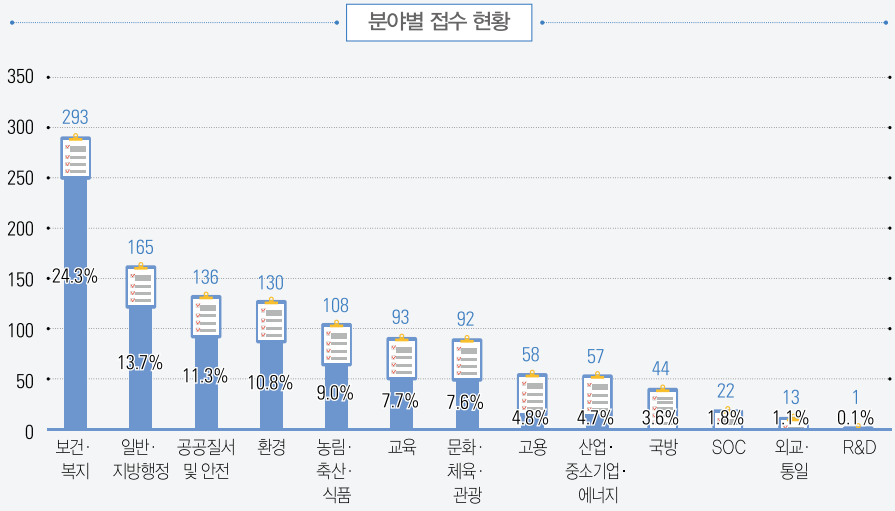
〈7월〉
사업 선호도 조사
- 일반국민 설문조사
-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8월〉
정부예산안 반영
-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논의
-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 확정

〈9~12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결과

국민들은 총 1,206건의 예산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일반·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통일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보건·복지(293건, 24.3%),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 복지·사회 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경제 분야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기대 효과: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기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도,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사업제안

-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 | e메일 | mybudget@korea.kr
- |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1.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8년 3월 중 총수입은 43.8조 원, 총지출은 46.4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21.2조 원으로 진도율은 27.1%이고 전년 동기 대비 7.8조 원 증가(진도율 0.3%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22.9조 원으로 진도율은 28.7%이고 전년 동기 대비 5.6조 원 증가(진도율 0.1%p 상승)하였다.

표 1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수입 (진도율)	113.4 (26.8)	163.1	196.0	223.2	267.2	299.4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21.2 (27.1)
총지출 (진도율)	117.3 (28.6)	154.0	184.8	225.4	251.1	282.0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22.9 (28.7)
통합재정수지	-3.9	9.1	11.3	-2.2	16.1	17.4	12.7	27.2	29.2	24.0	15.0	0.9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2	14.0	18.3	21.9	24.4	27.6	31.2	34.6	37.9	42.5	2.5	4.8	8.8
관리재정수지	-14.1	-5.0	-7.0	-24.1	-8.3	-10.2	-18.5	-7.4	-8.8	-18.5	12.6	-3.9	-10.5

주: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2018년 3월 중 국세수입은 28.9조 원(법인세 18.4조 원, 소득세 3.7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23.6조 원) 대비 5.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78.8조 원이며, 일반회계 76.8조 원과 특별회계 2.0조 원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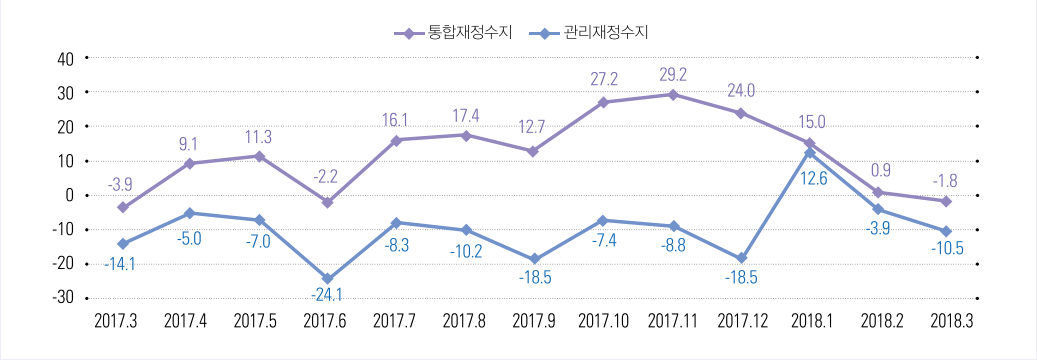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국세수입	69.9	105.3	123.8	137.9	168.7	189.5	207.1	236.9	251.9	265.4	36.6	49.9	78.8
일반회계	68.3	102.6	120.8	134.6	164.4	184.8	202.0	231.0	245.7	258.5	35.4	48.4	76.8
특별회계	1.5	2.7	3.0	3.3	4.4	4.8	5.1	6.0	6.3	6.9	1.2	1.5	2.0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8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8.8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2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 개선되었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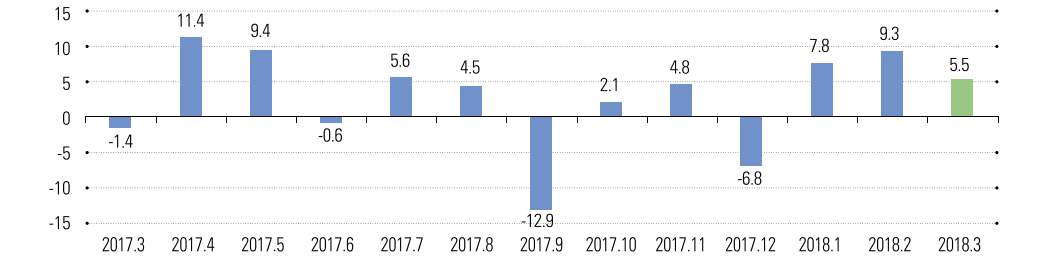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8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0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5.5조원으로, 국고채권 발행 증가(4.8조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증가(0.8조원) 등이 원인이다. 2017년 3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6.9조 원 증가하였다.

그림 3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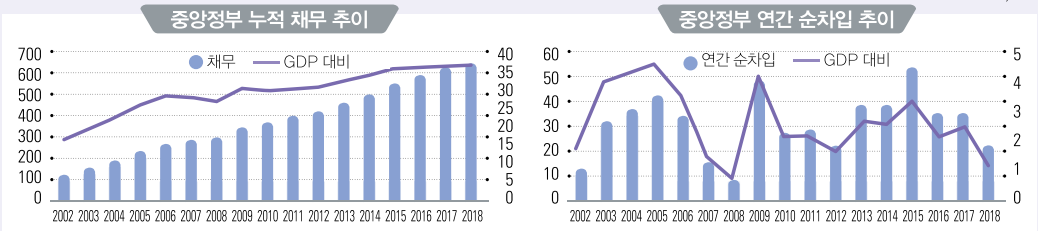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월별 순차입	−1.4	11.4	9.4	−0.6	5.6	4.5	−12.9	2.1	4.8	−6.8	7.8	9.3	5.5
연간 누계	18.0	29.4	38.8	38.2	43.8	48.3	35.4	37.5	42.3	35.4	7.8	17.1	22.7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그림 4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채무	289.1 (27.7)	297.9 (27.0)	346.1 (30.1)	373.8 (29.5)	402.8 (30.2)	425.1 (30.9)	464.0 (32.5)	503.0 (33.9)	556.5 (35.7)	591.9 (36.1)	627.4 (36.3)	650.0 (36.8)
연간 순차입	15.9 (1.5)	8.8 (0.8)	48.2 (4.2)	27.7 (2.2)	29.0 (2.2)	22.3 (1.6)	38.9 (2.7)	39.0 (2.6)	53.5 (3.4)	35.4 (2.2)	35.4 (2.5)	22.7 (1.3)

주: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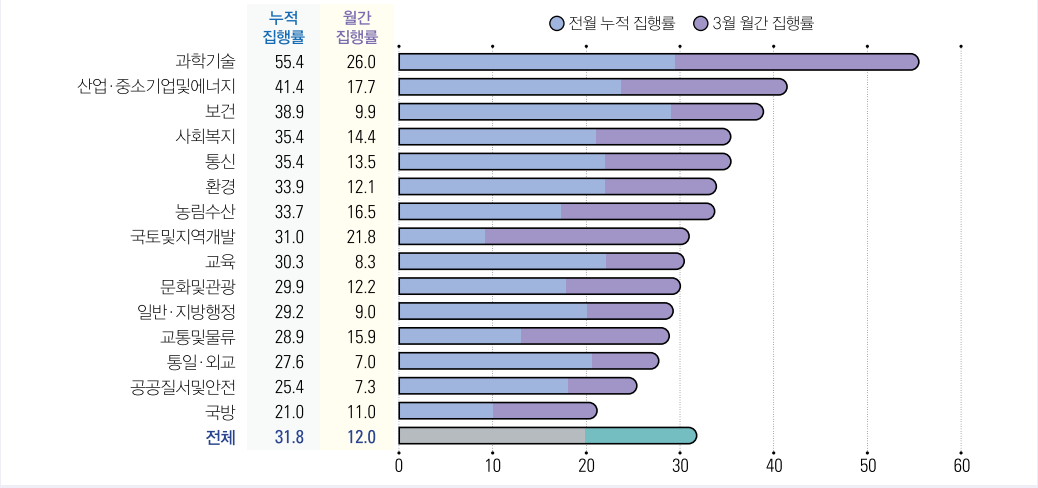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 238.6조 원 중 3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75.9조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8%를 집행하였다. 3월까지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55.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1.4%), 보건(38.9%)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21.0%), 공공질서 및 안전(25.4%), 통일·외교(27.6%) 분야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월 월간 집행액은 28.7조 원(12.0%)이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26.0%), 국토 및 지역개발(21.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7.7%)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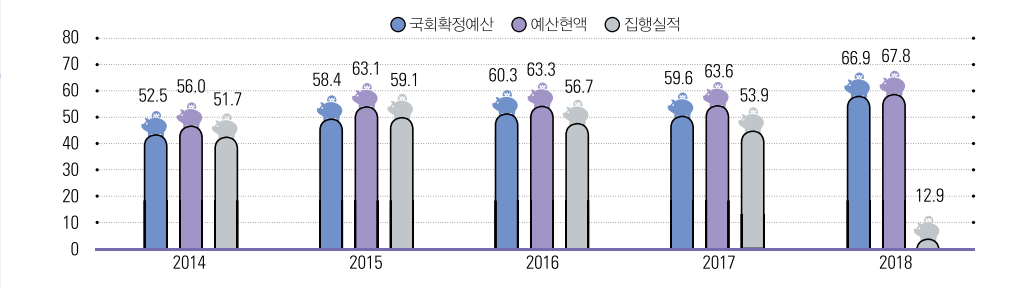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7.8조 원이며, 3월 누적 실집행실적은 12.9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1% 집행되었다.

그림 6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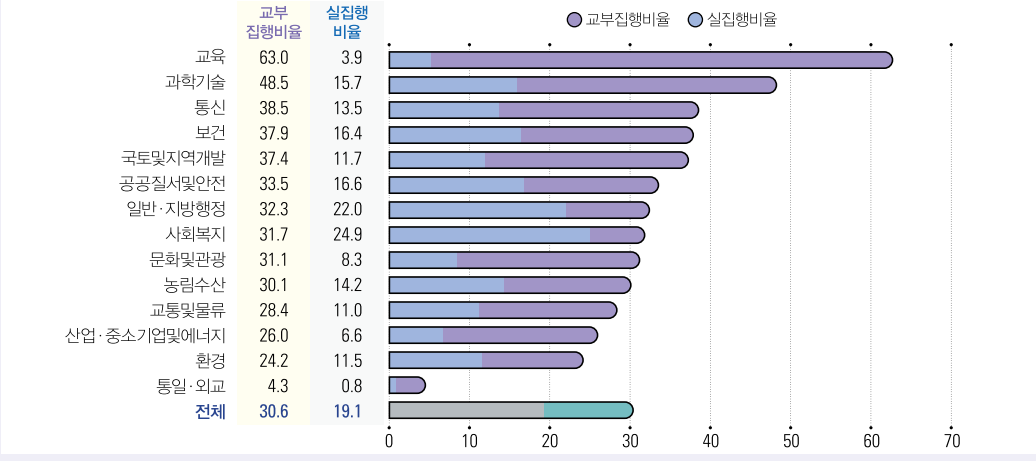


주: 2018년 집행실적은 3월까지의 누적 실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9조 4,041억 원, 농림수산 분야는 1조 3,156억 원, 환경 분야는 5,17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41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28억 원 실집행되었다. 교부집행률(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액)은 교육 분야가 63.0%로 가장 높지만, 실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실집행금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24.9%로 가장 높다.

그림 7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2018년 3월 누적 기준)

(단위: %)



주: 국방 분야의 교부집행률은 20.6%, 실집행률은 21.5%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2. OECD 통계로 보는 국가별 재정 규모 비교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정부 재정운용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국과의 재정 규모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OECD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재정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1]를 기준으로 하는 OECD 통계를 통해 각 국가별 수입, 지출, 그리고 재정수지, 부채 규모를 비교한다. 정부재정통계는 국가별, 국제기구별로 집계 기준,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발표하는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OECD의 재정통계는 UN의 국민계정 통계기준(SNA: Statistical National Accounts)과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의 일정 기준에 맞추어 발표하므로 국제비교 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1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제도 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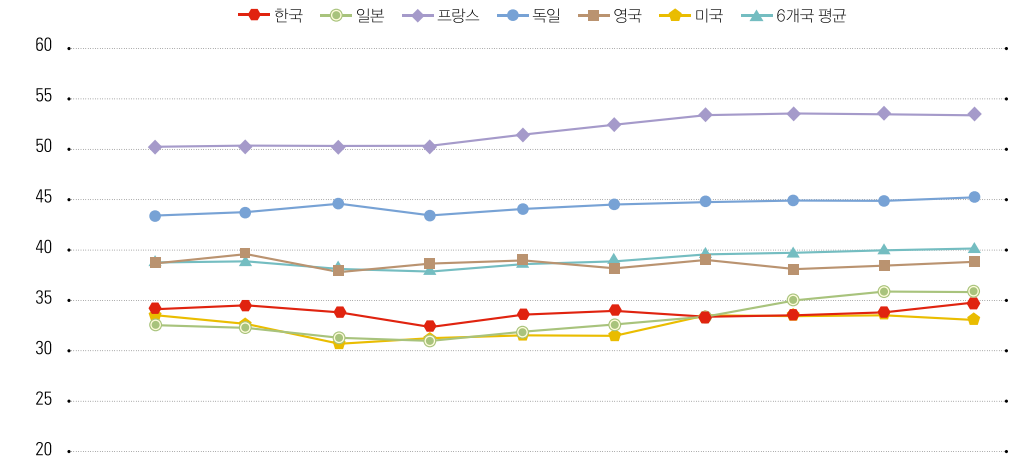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수입 규모는 GDP 대비 34.6%이다. 2008년, 2010년을 제외하면 33%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34%대를 기록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평균 일반정부 수입 비중은 2016년 기준 40.0%이다.

한국의 GDP 대비 수입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주요국 중 프랑스와 독일은 일반정부 수입이 2016년 기준 각각 GDP 대비 53.2%, 45.1%로 비교적 높다.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일반정부 수입 추이를 보이며, 영국은 30% 후반의 GDP 대비 수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일반정부 수입 추이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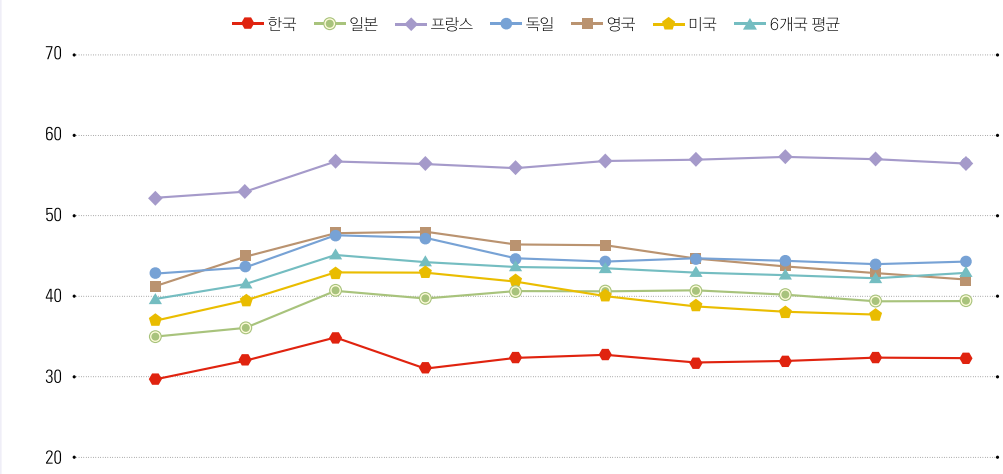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3.9	34.3	33.6	32.0	33.3	33.7	33.1	33.2	33.6	34.6
일본	32.2	32.0	30.9	30.6	31.6	32.3	33.1	34.8	35.7	35.7
프랑스	49.8	49.9	49.9	49.9	51.1	52.2	53.2	53.4	53.3	53.2
독일	43.0	43.4	44.3	43.0	43.8	44.3	44.5	44.7	44.7	45.1
영국	38.4	39.4	37.4	38.4	38.7	37.8	38.8	37.7	38.1	38.6
미국	33.4	32.4	30.3	30.9	31.2	31.2	33.4	33.3	33.4	32.9
6개국 평균	38.5	38.6	37.7	37.5	38.3	38.6	39.3	39.5	39.8	40.0

주: 6개국 평균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 비율의 산술평균임
자료: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의 일반정부 지출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32.3%이다. 지출 규모는 2007년 29.7%, 2009년 34.9%를 기록한 시기를 제외하면 3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일반정부 지출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평균은 2008년 이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7년 이후 50%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6.5%를 기록했다.

그림 2 일반정부 지출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9.7	32.0	34.9	31.0	32.4	32.7	31.8	32.0	32.4	32.3
일본	35.0	36.1	40.7	39.7	40.6	40.6	40.8	40.2	39.4	39.4
영국	41.3	44.9	47.9	48.0	46.4	46.3	44.7	43.7	42.9	42.1
미국	37.0	39.5	43.0	42.9	41.8	40.0	38.7	38.1	37.7	–
프랑스	52.2	53.0	56.8	56.4	55.9	56.8	57.0	57.3	57.0	56.5
독일	42.8	43.6	47.6	47.3	44.7	44.3	44.7	44.4	44.0	44.3
6개국 평균	39.7	41.5	45.1	44.2	43.7	43.5	42.9	42.6	42.2	42.9

주 1) 6개국 평균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의 산술평균임
2) 2016년은 미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임
자료: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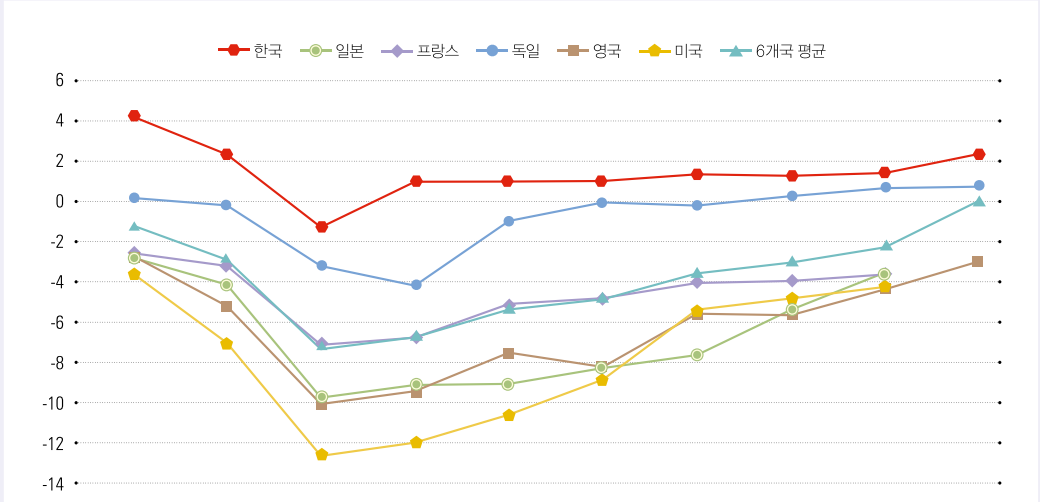
일반정부 재정수지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당해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이다. OECD에서 집계하는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경우, 한국은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4%이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은 -4%대, 일본과 프랑스는 -3%대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보인다.

그림 3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4.2	2.3	-1.3	1.0	1.0	1.0	1.3	1.3	1.4	2.4
일본	-2.8	-4.1	-9.8	-9.2	-9.1	-8.3	-7.6	-5.4	-3.5	–
영국	-2.7	-5.2	-10.1	-9.5	-7.5	-8.2	-5.6	-5.7	-4.4	-3.0
미국	-3.6	-7.0	-12.7	-12.0	-10.6	-8.9	-5.4	-4.8	-4.2	–
프랑스	-2.5	-3.2	-7.2	-6.8	-5.1	-4.8	-4.0	-3.9	-3.6	–
독일	0.2	-0.2	-3.2	-4.2	-1.0	0.0	-0.2	0.3	0.7	0.8
6개국 평균	-1.2	-2.9	-7.4	-6.8	-5.4	-4.9	-3.6	-3.0	-2.3	0.1

주 1) 6개국 평균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 비율의 산술평균임
2) 2016년은 일본, 미국, 프랑스를 제외한 3개국 평균임
자료: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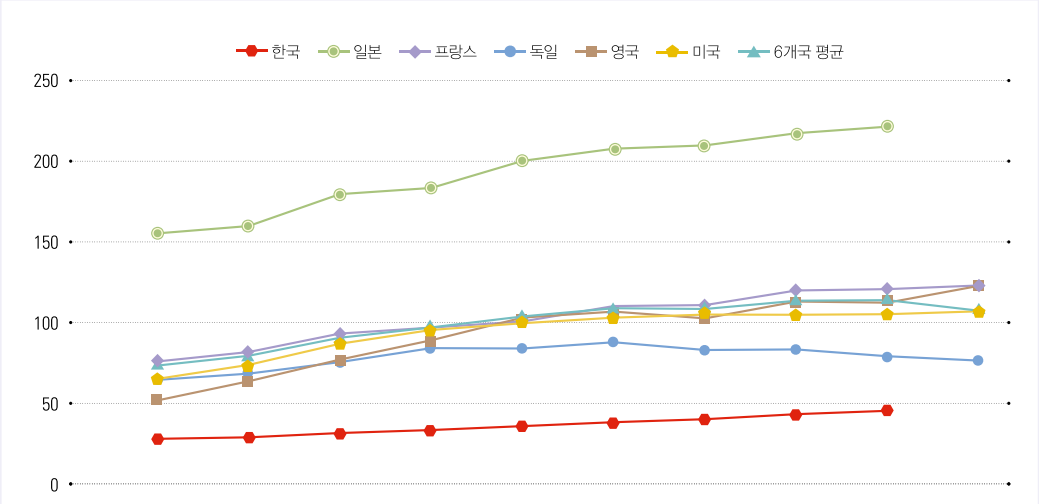
일반정부 부채[2]

부채 규모는 미래에 발생하는 지급 의무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중은 2015년에 45.8%이며, 2007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인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07년 73.0%에서 2015년 114.4%로 증가).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2011년에 200%를 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2011년에, 미국의 경우 2012년에 100%를 넘었다.

그림 4 일반정부 부채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7.7	28.6	31.4	33.3	36.0	38.4	40.4	43.6	45.8	–
일본	154.8	159.4	179.4	183.3	200.2	207.9	209.9	217.6	221.8	–
독일	64.2	68.1	75.5	84.5	84.3	88.2	83.3	83.7	79.3	76.5
프랑스	75.6	81.5	93.2	96.8	100.7	110.4	111.0	120.3	121.1	123.4
영국	51.4	63.4	77.0	89.1	103.3	107.0	102.8	113.3	112.6	123.1
미국	64.7	73.6	87.0	95.7	99.9	103.4	105.4	105.2	105.6	107.4
6개국 평균	73.0	79.1	90.6	97.1	104.1	109.2	108.8	113.9	114.4	1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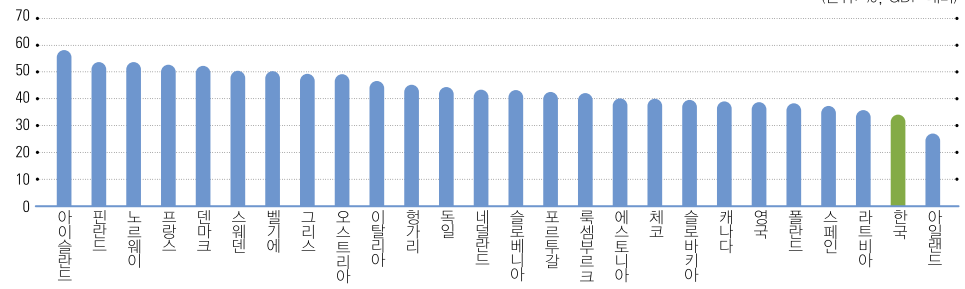
주 1) 6개국 평균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산술평균임
2) 2016년 평균은 한국, 일본을 제외한 4개국 평균임
자료: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시계열 비교를 위해, OECD에서 발표하는 국제 부채 통계를 활용하였다. 한국정부는 부채 통계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하는 국가채무(D1)과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누고 발표한다. 한국의 2016년 기준 국가채무(D1)는 38.3%(잠정치)이며, 2015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2015년 기준 43.2%43.2%이며, 공공부문 부채(D3)는 63.1%이다.

그림으로 보는 OECD 회원국의 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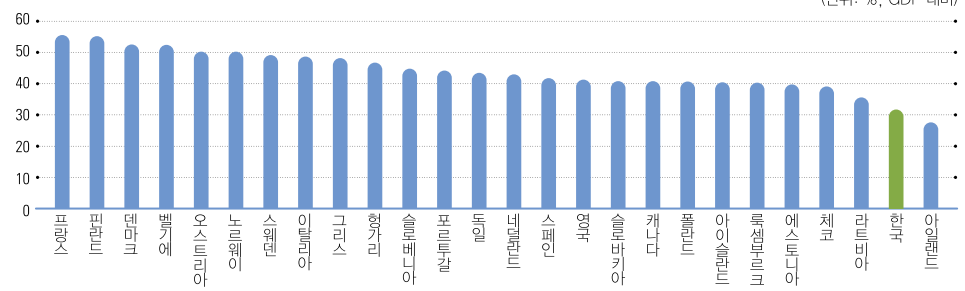
일반정부 수입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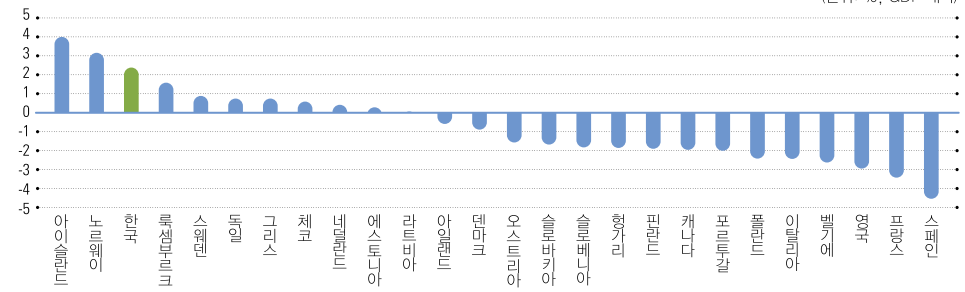
일반정부 지출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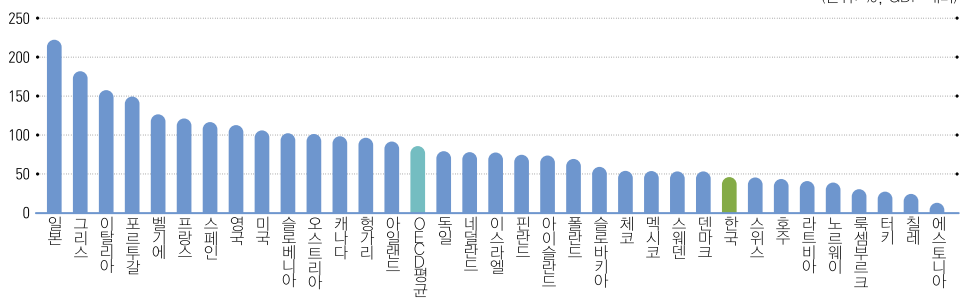
재정수지

(단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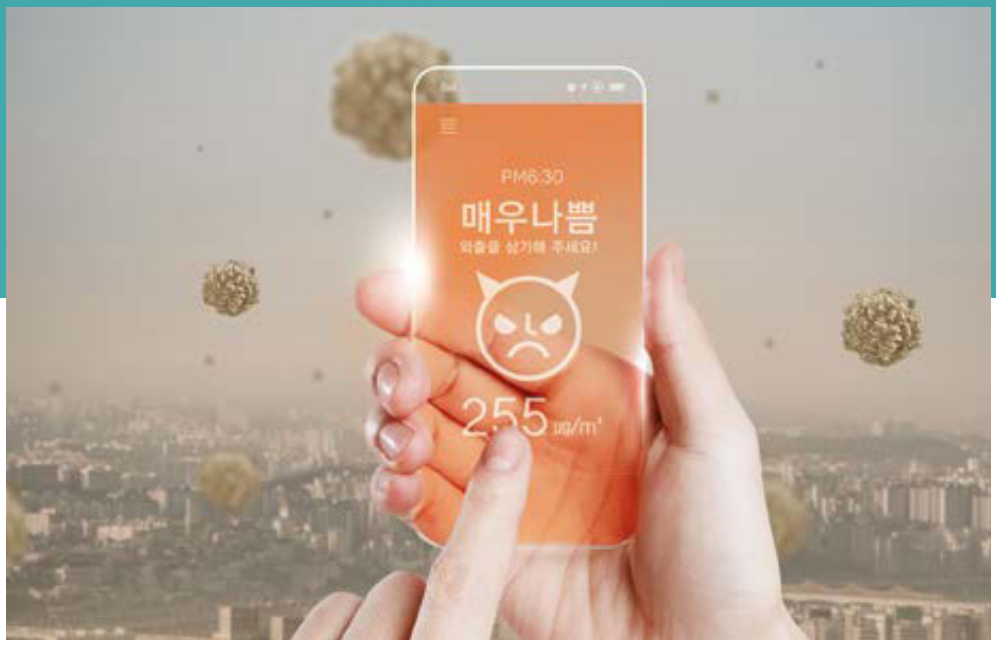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주: 일반정부 수입, 일반정부 지출, 재정수지는 2016년 기준이며, 일반정부 부채는 2015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달의 이슈키워드:
미세먼지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미세먼지'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비상저감조치'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며,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다. 이번 호에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수집기간: 2018.3.1.~3.31.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25번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는데, 주의보는 시간평균농도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PM_{10}) 기준 150㎍/㎥ 또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PM_{2.5}$) 기준 90㎍/㎥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평균농도가 PM_{10} 기준 300㎍/㎥ 또는 $PM_{2.5}$ 기준 180㎍/㎥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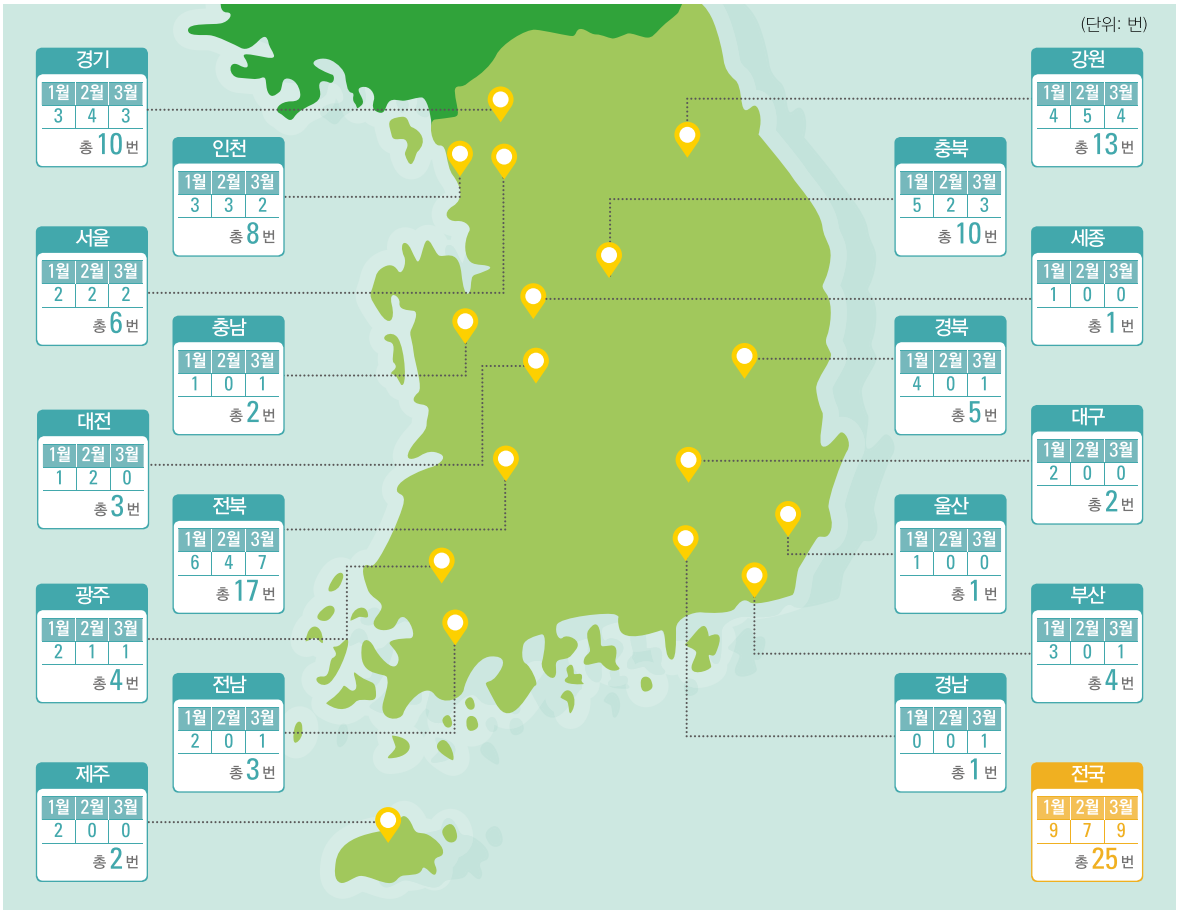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굴뚝원격 감시체계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개선 추진대책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87	394	2,143	3,523	325	186

자료: 환경부, 「2018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주: 전국에서 지역별 중복은 제외
자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87억 원).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을 지원하고 배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대기오염 사고 예방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대기오염측정망으로 대기 환경을 측정·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394억 원). 황사 등 장거리이동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지역별·오염 항목별 대기질 데이터를 측정·분석하여 대기환경 기준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모바일 앱 '우리동네대기질'에서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2,143억 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고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

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등)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 등) 개조 비용의 최대 973만 9,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05년 이전 제작 등 아래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차종과 연식에 따라 폐차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매연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기준
매연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기타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주 1)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기, 콘크리트펌프트럭
2)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군 제외 28개 시)
3) 특정노후경유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자료: 환경부,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8.1.)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 설치를 확대한다(각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3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3,523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86억 원)).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하이브리드자동차 6만 대, 전기자동차 2만 대, 수소자동차 130대를 보급·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차 구매자는 최대 1억 원(전기 대형 승합차)의 국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ybridbonus.or.kr)에서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자동차 구매 시 신청서를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수소충전소 위치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홈페이지(www.h2korea.or.kr)에서, 전기충전소의 위치는 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기충전소 헬프데스크(1661-9408)를 운영하고 있어 전기충전기 고장 신고 접수 등 각종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제·재정 전망과 재정 중점 분야: 2018-2019 예산안

김선옥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 하원에서 2018-2019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Spring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영국 재무부는 연 2회(Autumn Statement, Spring Statement) 국가 경제 전망 및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2017년 가을부터 가을 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후 봄 예산안(Spring Statement)은 재무장관의 주요 재정정책 발표로 대체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경제·재정 전망과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한다[1].

경제 전망

영국의 예산책임청(OBR: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영국의 EU 회원국 탈퇴, 정부의 봄 예산안 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경제 및 재정 전망을 2018년 3월 발표하였다. 지수연동국채 발행, 지방자체단체 재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7년보다 0.2%p 하락한 1.5%로 전망하였고, 2019년에 성장률이 1.3%로 하락한 후 점차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가 2022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은 파운드화 가치를 하락시켜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OBR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8년 2.4%로 상승한 후 점차

1 본고는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2017년 가을 예산안 「Autumn Budget 2017」과 봄 예산안 보도자료(2018년 3월), 그리고 예산책임청(OBR)에서 2018년 3월에 발간된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고용 분야는 2010년 보다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높은 고용율과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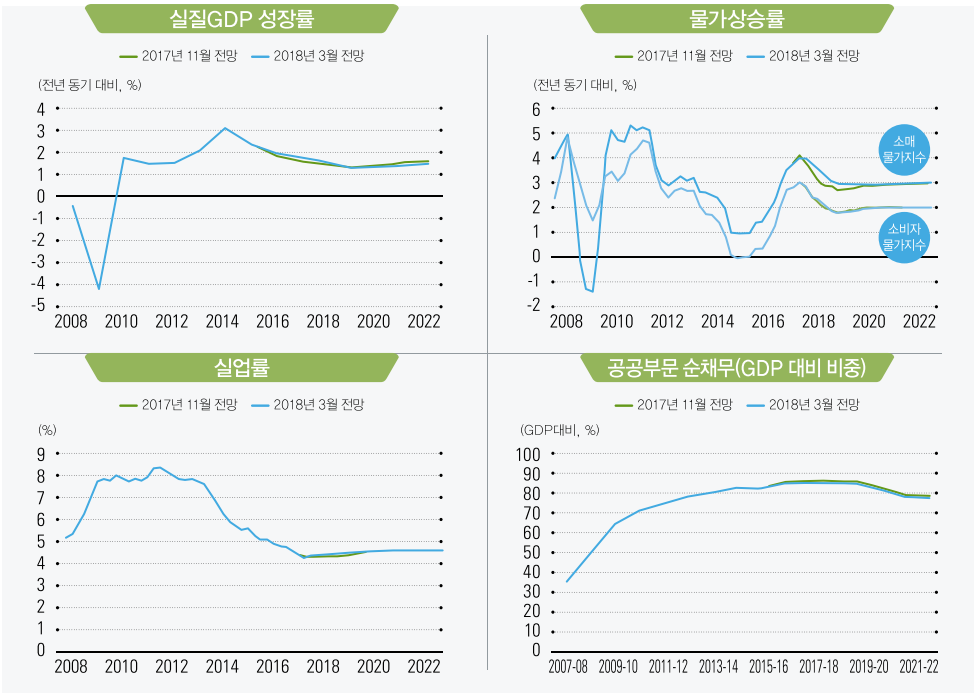
표 1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실적	전망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실질GDP 성장률							
2018.3 전망	1.9	1.7	1.5	1.3	1.3	1.4	1.5
2017.11 전망	1.8	1.5	1.4	1.3	1.3	1.5	1.6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2018.3 전망	0.7	2.7	2.4	1.8	1.9	2.0	2.0
2017.11 전망	0.7	2.7	2.4	1.9	2.0	2.0	2.0
실업률							
2018.3 전망	4.9	4.4	4.4	4.5	4.6	4.6	4.6
2017.11 전망	4.9	4.4	4.3	4.4	4.6	4.6	4.6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그림 1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forecast in picture, (2018.3.)

재정 전망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2009-2010회계연도에 GDP의 9.9%(1,530억 파운드)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세수 증가 및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2017-2018회계연도에는 GDP의 약 2.2%(452억 파운드)로 감소하였다. 순차입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순부채는 2018-2018회계연도에 GDP 대비 85.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2019회계연도에 GDP 대비 0.1%p를 줄이고 2020년 이후로는 눈에 띄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 영국의 재정 전망

(단위: 십 억 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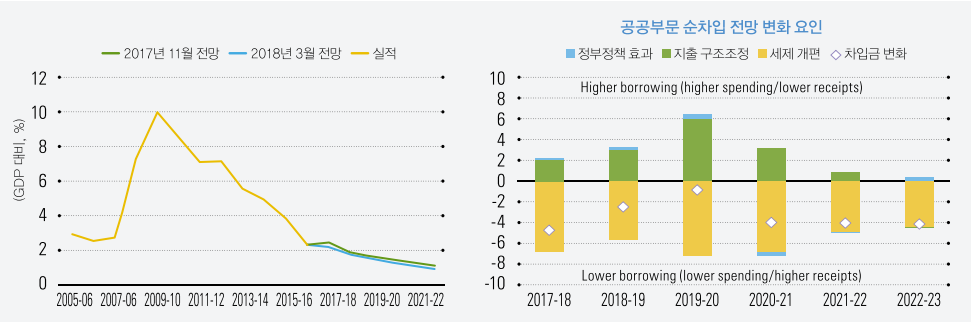
	실적	전망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세입과 세출(Revenue and spending)							
경상세입(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726.5 (36.6)	752.2 (36.6)	775.8 (36.7)	800.1 (36.8)	824.9 (36.8)	847.5 (36.7)	876.6 (36.7)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772.2 (38.9)	797.4 (38.8)	812.9 (38.4)	834 (38.3)	853.6 (38.1)	873.4 (37.8)	898 (37.6)
적자(Deficit: Current and previous fiscal mandate measures)							
경기조절 순차입(Cyclically adjusted net borrowing)	45 (2.3)	46.7 (2.3)	40.2 (1.9)	35.8 (1.6)	29.5 (1.3)	26.1 (1.1)	21.4 (0.9)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45.8 (2.3)	45.2 (2.2)	37.1 (1.8)	33.9 (1.6)	28.7 (1.3)	26.0 (1.1)	21.4 (0.9)
부채(Debt: Supplementary target)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1,727 (85.3)	1,783 (85.6)	1,835 (85.5)	1,880 (85.1)	1,868 (82.1)	1,841 (78.3)	1,893 (77.9)

주: ( )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재정건전화

영국 정부는 예산책임헌장의 재정 목표로 2020-2021회계연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8년 3월 OBR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세수 증가, 집행효율성 개선 등으로 2년 빠른 2018-2019회계연도에 동 목표를 달성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은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452억 파운드로 재정적자의 규모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의 순차입(net borrowing)은 2018-2019회계연도에도 계속 하락하여 GDP 대비 적자 규모는 GDP의 2% 아래로 하락하고 2022-2023회계연도에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 영국의 공공부문 GDP 대비 순차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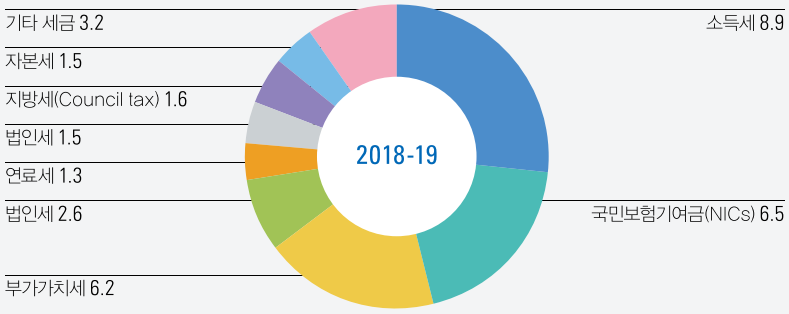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2018-2019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영국의 2018-2019회계연도 공공부문 세입 규모는 약 7,758억 파운드로 GDP 대비 36.7%를 차지하고 있다. 세입원 별로 소득세가 GDP 대비 8.9%(1,885억 파운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보험기여금(NICs)이 6.5%(1,365억 파운드), 부가가치세가 6.2%(1,304억 파운드)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2018-2019회계연도 GDP 대비 주요 세입원 비중

(단위: %)



주: GDP 대비 비중이 작은 세입원은 도표에 표시하지 않아, 총 합이 100이 되지 않음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8.3.)

표 3 GDP 대비 주요 세입원 비중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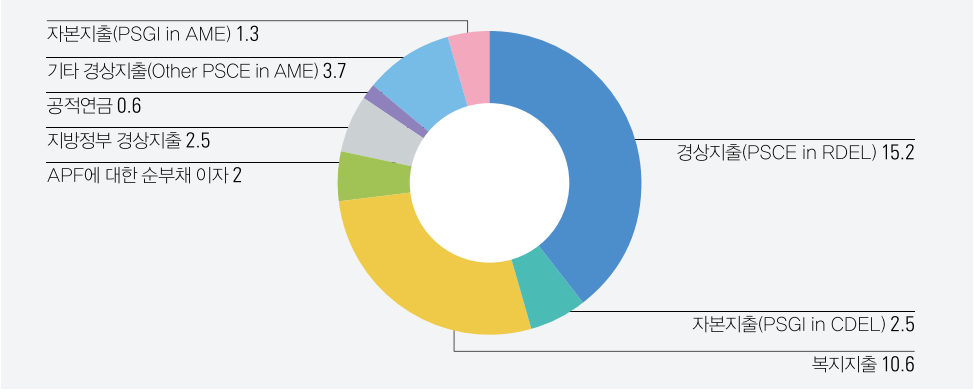
	실적	전망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경상 세입(Current receipts)	36.6	36.6	36.7	36.8	36.8	36.7	36.7
국민 계정 세금(National Accounts taxes)	33.8	34	34.3	34.3	34.3	34.1	34.1
소득세(Income tax)	8.9	8.8	8.9	9.0	9.0	9.1	9.1
국민보험기여금(NICs)	6.3	6.4	6.5	6.5	6.5	6.5	6.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6.1	6.1	6.2	6.2	6.2	6.2	6.2
법인세(Onshore corporation tax)	2.6	2.6	2.6	2.5	2.4	2.4	2.4
연료세(Fuel duties)	1.4	1.4	1.3	1.3	1.3	1.3	1.3
법인세(Business rates)	1.5	1.4	1.5	1.5	1.4	1.4	1.4
지방세(Council tax)	1.5	1.6	1.6	1.6	1.6	1.6	1.6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duties)	1.0	1.0	1.0	1.0	0.9	0.9	0.9
자본세(Capital taxes)	1.5	1.5	1.5	1.5	1.6	1.6	1.6
석유 및 가스세(UK oil and gas receipts)	0.0	0.1	0.0	0.0	0.0	0.0	0.0
기타 세금(Other taxes)	2.9	3.2	3.2	3.2	3.2	3.1	3.1
이자 및 배당(Interest and dividend receipts)	0.3	0.4	0.4	0.5	0.5	0.5	0.6
기타 세입(Other receipts)	2.4	2.2	2.0	2.0	2.0	2.0	2.0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총관리지출(TME: Total Managed Expenditure) 규모는 2018-2019회계연도에 8,129억 파운드로 GDP 대비 38.4%를 차지했다. 이중 부처지출한도(DEL) 중 경상지출이 GDP 대비 1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연간관리지출(AME) 중 복지지출의 비중은 10.6%로 높게 전망하였다.

그림 4 2018–2019회계연도 GDP 대비 주요 지출 비중

(단위: %)



주: APF(Asset Purchase Facility): 영란은행의 자산매입대비 보유자금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총관리지출은 6개년도 예측 기간 동안 GDP의 약 1.2%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처지출한도의 경상지출(GDP의 1.1% 감소)과 연간관리지출의 복지지출(GDP의 0.4% 감소)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표 4 GDP 대비 주요 지출 비중 전망

(단위: %)

	전망						실적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16-'17
총관리지출(TME)	38.9	38.8	38.4	38.3	38.1	37.8	37.6
부처지출한도(DEL)	18.1	17.8	17.7	17.8	17.8	17.5	17.3
경상지출(PSCE in RDEL)	15.7	15.4	15.2	15	14.7	14.5	14.3
자본지출(PSGI in CDEL)	2.3	2.4	2.5	2.7	3.0	2.9	3.0
연간관리지출(AME)	20.8	21	20.7	20.6	20.3	20.3	20.3
복지지출(Welfare spending)	10.9	10.7	10.6	10.5	10.3	10.3	10.3
APF에 대한 순부채이자(Debt interest net of APF)	1.8	2.0	2.0	1.9	1.9	1.9	2.0
지방정부 경상지출(Locally financed current expenditure)	2.3	2.4	2.5	2.4	2.3	2.3	2.3
공적연금(Net public service pension payments)	0.6	0.6	0.6	0.6	0.6	0.7	0.7
기타 경상지출(Other PSCE in AME)	3.6	3.7	3.7	3.8	3.8	3.7	3.7
자본지출(PSGI in AME)	1.7	1.7	1.3	1.3	1.3	1.3	1.3

주: APF(Asset Purchase Facility): 영란은행의 자산매입 대비 보유자금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참고〉 영국의 공공부문 지출 구분

01 영국은 1998년부터 지출에 대하여 부처지출한도(DEL), 연간관리지출(AME), 총관리지출(TEM) 개념을 도입하였음

- 총관리지출(TEM: Total Managed Expenditure): 전체 지출을 의미하며 부처지출한도(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와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로 구분
- 부처지출한도(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공공서비스, 보조금, 관리 및 자본 투자에 대한 지출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는데 법정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 전체가 해당함
-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및 부채이자와 같이 다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포함하는데 주로 법정지출에 해당되는 항목이 해당함

02 부처지출한도(DEL), 연간관리지출(AME)은 다시 경상지출(Resource Budget)과 자본지출(Capital Budget)로 분류되고, 이는 각 부처 지출한도 내의 하위 지출한도로 작용함. 경상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PSCE: 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자본지출은 공공부문 총투자(PSGI: 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로도 표현함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재정학회, 「외국의 중기재정계획 내용구성 비교 및 시사점 연구」 중 영국 사례, 2012

재정 중점 분야

영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서 공공서비스 지원, 미래에 대한 투자, 낮은 세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투자를 위하여 2016년 이후 600억 파운드의 신규지출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2018-2019회계연도의 중점사업으로 보건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s)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택건설 지원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인공지능·국민생활임금 보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순조로운 브렉시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으로 30억 파운드를 책정하였다.

보건의료제도 지원 확대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제도(NHS)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약 90억 파운드를 추가하고, 이 중 2018-2019회계연도에만 40억 파운드를 NHS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병원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5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단위: 백만 파운드)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총지출	1,570	3,215	5,885	7,045	6,475	7,000
주택						
주택보급 확대(Accelerated Construction)	90	230	170	200	-	-
서민주택 보급(Affordable housing)	495	605	1,215	610	-	-
주택기반기금(Housing Infrastructure Fund)	60	300	1,160	2,135	1,060	1,185
소규모 택지 기반 구축 및 개선(Small sites infrastructure and rededication)	0	275	355	120	-	-
토지매입기금(Land Assembly Fund)	0	0	220	355	355	355
교통						
도로 및 시내교통(Roads and local transport)	365	360	290	415	-	-
차세대 차량(Next generation vehicles)	75	145	155	115	-	-
디지털 철도 강화(Digital rail way enhancements)	30	55	165	285	-	-
도시연결(Cambridge-MiltonKeynes-Oxford corridor)	5	135	0	0	-	-
도시재생기금(Transforming Cities Fund)	0	140	355	485	1,010	-
대중교통시스템(Tyne & Wear Metro)	0	0	25	35	265	-
통신						
광섬유 및 5G 투자(Fibre and 5G investment)	25	150	275	290	-	-
연구개발						
연구개발기금(R&D Funding)	425	820	1,500	2,000	2,345	-

주: 2021-2023회계연도의 예산은 미확정
자료: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신기술 분야 지원 및 국가생산성투자기금

그리고 교육과 기술 혁신 분야에 22억 파운드를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310억 파운드는 국가생산성투자기금(NPIC: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통한 인프라, 연구개발, 주택자금에 지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영국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44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웨스트 미들랜드 주는 2030-2031회계연도까지 21만 5,000호의 주택 공급 및 토지 개선 기금으로부터 1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로이드 뱅크 그룹(Lloyds Banking Group)은 주택 성장 파트너십 규모를 2억 2,000만 파운드로 두 배 이상 늘려 소규모 건축가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런던은 2021-2022회계연도 말까지 주택 공급을 11만 6,000호 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을 포함하여 2만 6,000개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17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 면세 혜택을 12만 5,000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인상함으로써 약 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민생활임금 보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영국 정부는 개인 수당 인상을 통하여 3,10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를 거두었고, 2010년 이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 면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법정최저임금을 2018년 4월부터 7.83파운드로 인상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2,000파운드 이상으로 인상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한국재정학회. (2012). 「외국의 중기재정계획 내용구성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18: Philip Hammond's speech. 〈www.gov.uk/government/speeches/〉.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하연수
hayonsu@naver.com

징병제로 유럽을 석권했지만
군자금 확보에는 실패하다

France

프랑스는 로마제국의 피를 이어받은 중세 유럽의 대국이었습니다. 절대왕정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루이 14세 시절의 프랑스는 강력한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에 의해 극적으로 왕정이 무너졌지요. 프랑스혁명은 사실 왕실의 재정 문제, 즉 디폴트가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 역대 프랑스 국왕은 다른 유럽 국가의 국왕과 마찬가지로 몇 차례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전에는 타이유(taille)라는 이중과세를 국민에게 매기고 있었습니다.

타이유는 토지세와 재산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영국과의 백년전쟁(1337~1453) 때 매겨졌습니다. 전쟁 때의 특별세로 매겨진 것인데, 전쟁이 끝나도 폐지되지 않고 프랑스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귀족이나 승려, 관료 등은 타이유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세 특권을 가진 귀족들은 부자가 되고 농민이나 서민들은 더 궁핍해지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3퍼센트의 귀족이 90퍼센트의 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를 하는 청부인(tax-farmer)의 부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제국을 비롯한 제국들은 세금 징수 청부인의 부정에 의해 국가재정이 악화되곤 하였는데, 같은 일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국가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디폴트 때문에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당시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정 압박의 요인입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 루이 16세도 엄청난 빚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전 국왕의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 전쟁 비용으로 빚은 30억 리브르에 달하였습니다. 신용이 없는 프랑스는 이자가 5~6퍼센트로 높았고, 이자만 2억 리브르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의 국가 세수가 2억 6,000만 리브르 정도였으니 세수의 절반 이상이 이자 지급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영국은 잉글랜드 은행의 창설에 의해 국채의 이자는 3퍼센트였습니다.

루이 16세로서는 자국의 빚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정비하고자 1777년에 스위스의 은행가 자크 네케르(Jacques Necker)를 재무총감으로 발탁합니다. 네케르는 국가재정을 정비하기 위해 세금징수 청부인제도의 개혁에 착수합니다.

당시의 청부인은 세금징수와 더불어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때문에 청부인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전

에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세금징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연히 청부인은 국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유복한 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부인이 되면 국가가 인정한 세금징수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즉, 세금징수 청부인 제도라는 것은 유복한 자가 세금징수권을 얻어 더욱 유복해지고 민중은 더욱 궁핍해지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초래하였지요.

네케르는 이 제도를 뜯어고쳐 청부인이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부인에 대해 엄격한 감시제도를 만들어 부정행위를 막았습니다. 이런 개혁에 프랑스의 귀족이나 특권계급은 맹렬히 반발하였습니다. 세금징수 청부인제도는 그들의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팸플릿을 사용하여 네케르를 집요하게 공격하였습니다.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오늘날의 소책자와 같은 얇은 팸플릿이 다수 발행되어 시민들에게 폭넓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네케르가 개신교 신자라는 것도 있어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공격하기가 쉬웠지요.

'스위스의 유복한 은행가가 프랑스의 부를 뺏어 간다'는 글이 담긴 팸플릿이 파리에 범람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케르는 강력한 대항책을 모색합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국가의 세입과 지출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오늘날은 상식으로 여겨지는 일이지만,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재정 내역을 공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국가재정은 비밀의 영역이었습니다. 네케르로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재정 내역의 공표는 프랑스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 세입 2억 6천만 리브르, 그중 왕가의 지출이 2,500만 리브르나 되었습니다. 국민의 연간 수입이 100리브르 정도였으니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서민들은 농작물 흉작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네케르의 회계 공표로 왕가의 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케르는 이 공표로 프랑스 시민의 강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다는 것은 네케르가 청렴하다는 증거다', '네케르는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비판을 받게 된 루이 16세는 1781년 네케르를 파면시킵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네케르는 7년 뒤에 재무통감으로 복직합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루이 16세가 다시 네케르를 파면시키자 파리의 시민들은 격노하며 마침내 봉기합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혁명기에 혜성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권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징병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지요. 징병제는 국가재정에 있어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 군은 '용병'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돈으로 고용된 병사에 의해 군이 유지된 것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실시하면 용병에 비해 훨씬 덜 돈을 쓸 수 있었지요. 따라서 징병제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규모의 병력 보유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강행했던 것은 당시 프랑스가 징병제를 빨리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왕정이 무너진 사건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혁명이 자기네 국가에도 파급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결속해서 프랑스혁명이 실패하도록 간섭했습

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간섭에 징병제로 맞섰습니다. 1793년 '국민총동원법'을 만들어져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모두 징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는 정식으로 징병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징병제에 의해 값싸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 주변 국가들을 무찔렀습니다. 징병제로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었지만, 결국에는 군자금 부족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징병제에 의해 군사비가 훨씬 싸졌지만 유럽 각지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무기나 식량 등의 조달에 막대한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는 그만큼의 돈을 마련하는 수완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천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는 1806년, 프랑스 점령하의 네덜란드를 홀란드 왕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세계 각지의 자금이 모이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를 잘 활용했다면 군자금은 쉽게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암스테르담의 금융가들을 고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암스테르담의 대부분의 금융가는 런던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세계 금융의 중심은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옮겨 갔습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왕정 시대부터 디폴트를 거듭하는 바람에 신용이 없어져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점령지로부터의 배상금으로 군비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는 법. 할 수 없이 그는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보유하던 식민지를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미국 정부에 1,500만 달러로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매각된 것은 현재의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텍사스 등 15개 주에 달하는 막대한 지역이며 미국 영토의 23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1805년에는 프랑스혁명에 의해 폐지되었던 소금세를 부활시켰습니다. 소금세는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제도로 왕정 시대 프랑스의 주요 재원이었습니다. 소금의 가격에 세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까다로운 세금이라 프랑스혁명 직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세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은 군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의 가장 큰 대항 세력이었던 영국은 진보적인 세금제도와 국채에 의해 충분한 군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폴레옹의 패배는 필연적이었던 셈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사례로 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용」 출간

5년 치 빅데이터 분석 따라만 하면 어느새 'dBrain 고수'

디브레인운영본부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은 428조 원이다. 개인이 돈을 송금하려면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 이체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은 어떻게 오고 갈까? 정답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이다. 국민들에겐 낯선 플랫폼이지만 중앙정부든 자치단체든 우리나라 재정 담당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디브레인에 접속해야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돈 1원을 써도 디브레인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디브레인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한국재정정보원이다.

국가재정업무의 '뇌' 디브레인

이처럼 필수적인 업무 인프라이다 보니, 디브레인에서 처리되는 재정업무가 하루 평균 50만 건이나 된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할 때도, 부처가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도, 자치단체가 민간에 공사비나 물품값을 지급할 때도 디브레인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하루에 이체되는 돈이 무려 8조 원에 이른다. 예산집행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회계결산, 기금, 채권, 융자, 국유재산 관리 등은 물론 매일매일 들어오는 세입도 디브레인에 집계된다. 디브레인에서는 나라살림의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지켜볼 수 있고, 재정당국은 디브레인 통계에 기반을 둬 재정을 운용한다. 말 그대로 국가재정 업무의 '뇌(Brain)'인 셈이다.

사람 뇌만큼 복잡·정교하고 어려운 디브레인

디브레인은 매우 크고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은 사용이 쉽지 않다. 특히 나랏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 세금이 들어오는 국세청·관세청,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49개 기관의 82개 시스템과 연계돼 있을 만

큼 방대하다. 또한 예산의 편성·배정·변경·이월, 채권의 회수·변경·마감·소멸, 물품의 교환·매각·양여·불용·대부 등 익혀야 할 기능이 많다. 더구나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라서 1~2년 단위로 업무가 바뀐다. 그러다 보니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에는 시스템 사용법을 문의하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하루 평균 1,500통이나 걸려 온다. 결산철에는 4천 통이 훌쩍 넘기도 한다. 문의 내용도 과오납 처리, 불납결손, 내부거래 제거, 결산분개 등 수천 가지에 이른다.

5년치 질문 170만 건 빅데이터 분석·정리

이에 재정정보원은 지난 5년 치 질문 170만 건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뒤 예산, 수입, 채권, 지출, 기금, 융자, 결산 등 11개 분야별로 공무원들의 궁금증과 해결책을 정리해 「사례로 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활용」을 펴냈다. 예를 들어 일반지출 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19만 8,400여 건의 전화 및 온라인 문의가 있었는데, 각 질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관서운영경비가 가장 많고, 세부내역을 분류하면 카드→지급→출납→교부→청구 순이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 그림처럼 된다.

또한,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에 대해 해당 시스템 화면을 그림으로 보여 주면서 해결 방법을 설명했다.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업무 팁까지 곁들인 것도 특징이다. 채권을 예로 들면 △채권 종류 △관련 법령 △채권업무 흐름도 △절차 △주요 용어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 뒤 사용자들의 질문과 재정정보원의 답변을 달았다. 디브레인 시스템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책 한 권으로 재정 각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검색이 쉽도록 색인도 정리해 실었다.

운영 경험 축적해 챗봇 등으로 진화할 계획

디브레인 시스템은 유엔(UN)에서 공공행정 대상을 받았을 만큼 우수하다. 재정정보화시스템(FMIS)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능을 자랑한다. 실제 한국재정정보원에는 디브레인을 견학하려는 외국 공무원들이 한해 20여 차례 방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스템만 뛰어나고 사용법이 어려우면 우수한 기능들이 자칫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기능을 설명한 그저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사례 중심의 해설' 관점에서 책을 기획·제작했다. 기업들이 '소비자 의견 반영이 상품 경쟁력'이라며,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요구 사항을 반영하듯이, 지난 5년간 시스템 사용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점을 분석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매뉴얼이 아니라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정보원은 6월부터 이 책을 디브레인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 재정정보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chatbot)도 도입해 공무원들의 상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디브레인 운영 업무가 민간업체 이곳저곳을 떠도느라 운영 경험이 축적될 수 없었는데, 이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운영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사용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책은 그런 선순환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eNaraOn 홍보전략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eNaraOn 운영단은 2018년 5월 2일(수) eNaraOn시스템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NaraOn」 동영상 기반 홍보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캠페인,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eNaraOn시스템이 관계기관·기업·국민 등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미주개발은행(IDB) 국제협력 세미나 참석

한국재정정보원과 미주개발은행(IDB)은 2016년 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11일(수)과 12일(목) 양일에 걸쳐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중남미 국가 FMIS 현대화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DB 관계자를 대상으로 dBrain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한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경험 전파를 위해 dBrain 사례 연구에 대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참여 방안과 중남미 공무원 대상 FMIS 연수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IDB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dBrain시스템 세미나를 통하여 IDB회원국 FMIS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dBrain시스템 우수성을 전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어 향후 중남미 국가 dBrain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월간

나라재정

MAY
2018 Vol. 17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현수(한국재정정보원장 직무대행)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